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과제책임자 김정혜 부연구위원

##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에 따른 대응 강화 방안

### 초록

■ 기술매개 성폭력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젠더폭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응 법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전통적 성폭력 개념을 토대로 형성된 법률은 기술매개 성폭력을 포섭하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이 성차별에 기반을 둔 이중 성규범과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등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검토하여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특히 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 피해자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화와 현행 법률의 내용 및 한계를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분석한 다음,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개선과 피해촬영물 등 확산 차단 조치 강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영역에서 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 <표>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성 및 유포죄 정비
-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 조항 정비 검토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정비
- 성적 이미지의 의사에 반한 소지죄 신설
-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성폭력으로서의 속성 가시화
- 개인정보 악용 기술매개 성폭력범죄 가중 처벌
- 성매매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대상자를 성매매피해자의 범주에 추가
- 온라인 스토킹의 정의 및 가해자 조치 확대
- 소위 '그루밍' 범죄의 범위 확대
- 가해자의 책임과 배상명령의 확대
- 공소시효 적용 완화

####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개선과 피해촬영물 등 확산 차단 조치 강화

- 수사 과정에서 유포 여부 확인 및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의무화
- 온라인 저장소 등 촬영기기 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명령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향상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정비와 지원자 전문교육 실시
- 삭제 지원 범위 확대
- 성폭력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1. 배경 및 문제점

- ▶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sup>1)</sup>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폭력은 아님. 오프라인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여성혐오와 젠더기반폭력이 기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됨으로써 기술매개 성폭력이 되고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이 가세하여 가해와 피해가 모두 확대되는 한편, 물리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기술이 결합하면서 전통적 형태의 젠더폭력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폭력과 피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 이유에서 물리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에 비하여 사소화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의 삶과 오프라인에서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온라인 경험은 전체로서의 삶에 통합되어 있으며,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만큼이나 여러 방면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Dunn, 2020: 20-21). 기술매개 성폭력은 종종 물리적 접촉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물리적 접촉이 없는 기술매개 성폭력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는 신체적인 고통을 야기하며, 경제적, 직업적, 학업적 손실로 이어지고,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삶을 재구조화 하도록 하며,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으로 연장되어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
-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는 스토킹 피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짐.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동시에 다수가 접근가능하며 콘텐츠의 소비 행위를 통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무제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함. 온라인에서의 단 한 번의 가해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지속적, 반복적인 피해로 경험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수히 많은 가해자를 만들어내어 피해자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다수에 의한 다발적이고 장기적인 가해를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음. 피해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또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위험은 피해자의 안전감을 박탈하고 상시적인 불안에 놓이게 하며 가해 ‘행위’ 자체의 기간이나 횟수와는 무관하게 피해 경험을 장기화함.
- ▶ 젠더폭력이 사회규범에 의해 지지되고 온라인 공간이 삶에 통합되어 있는 만큼 기술매개 성폭력은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함. 강간이 여전히 ‘성욕 과잉의, 치료가 필요한, 정상성 외부에 있는 자의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공격’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이에서 ‘저항의 현저한 곤란’을 야기하는 물리적 폭력 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처럼, 기술매개 성폭력 또한 ‘비정상적’ 소수가 명확한 계획과 의도를 갖고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님. 여성혐오의 역사와 이중적 섹슈얼리티 규범 속에서 관습적인 남성성을 실천하는 행위가 곧 기술매개 성폭력이 될 수 있음.
- ▶ 기술매개 성폭력은 사생활의 침해를 수반하며 점점 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성적 가해를 목적으로 하는 ‘신상 털기’와 개인정보의 악용, 개인정보와 성적 콘텐츠의 결합, 개인정보를 여성혐오적이거나 성적인 맥락에서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젠더폭력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부정적 영향을 끼침.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기술매개 성폭력을 비롯하여 침해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도록 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모색하도록 함.

1) “기술매개 성폭력”은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디지털 기술이 매개된 성폭력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유사한 용어로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이 사용되고 있음.

- ▶ 오프라인에서 성폭력이 직·간접적으로 여성들의 행동과 경험, 활동을 전반적으로 제약하고 공동체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몰아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기술매개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험 범위를 축소시키며 공론장에서 여성을 침묵시키고 이내 추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그러한 영향은 비단 온라인 공간 내에서 멈추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도록 함.
- ▶ 기술매개 성폭력의 만연함과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은 한참 뒤쳐져 있음. 실체법과 소송법 모두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범행과 피해, 물질적 증거를 토대로 하는 데에 머물러 있고, 법이 가닿지 못하는 영역의 범행이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뒤에야 문제된 만큼의 보완을 겨우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사건 처리 절차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아직 구성되는 중이고, 삭제에 초점을 둔 지원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필요와 욕구는 협소해지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상황임. 사건을 신고, 상담하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지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피해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지, 심지어는 범행의 기반이 된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은, 온라인이 아직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 공간임을 보여줌. 전통적 유형의 성폭력범죄조차 온전하게 피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법문화와 법현실에서, 기술이 매개된 성적 폭력이라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피해를 제기하는 일은 지난한 과정임.

## 2. 조사 및 분석결과

### ① 상담 사례를 통해 본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 분석

#### 상담 사례 개요 및 가·피해의 특성

- ▶ 기술 변화에 따라 기술매개 성폭력 가해와 피해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반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원할 법·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은 여성이 피해자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젠더폭력이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성폭력의 한 형태로서, 온라인 문화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법적, 제도적 차별의 공백, 관대한 양형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
- ▶ 기술매개성과 가·피해의 관계 유형
  - 불법촬영 중심의, 데이트 관계의 커플이나 부부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매개 성폭력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는 사례가 동의 촬영 상담보다 많은 편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의 남성이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권리를 가진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랜덤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만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술매개 성폭력 사례들은 기술 접근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10대~20대 여성의 피해 사례가 많았음.
  - 직장 동료나 업무상 알게 된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특성, 인적 신뢰관계의 이용, 직장 내 유포 가능성,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구해야 하는 경제적 필요 등이 피해와 대응에 취약하게 하는 요소인 반면, 촬영물 등의 유포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에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잘 구비되어 있을 경우 조직 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불특정 다수의 가담은 기술매개 성폭력의 끝없는 유포, 재유포와 관련한 유형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익명의 다수가 재유포자로 참여함으로써 추가적, 연쇄적,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불안피해'를 상존하게 하지만 오히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재유포가 최초 유포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재유포 피해에 대한 인식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 속성에 따른 성폭력 특성

-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진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매개 성폭력 및 성착취가 부상하고 있으며, 법 제도의 미비함이나 신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해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
  -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 사례들에서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일상적 괴롭힘으로서 스토킹이 피해에 결합되고 있거나 피해 그 자체로 나타난다는 점임. 스토킹이 피해자의 소셜 미디어나 이에 연동된 주변인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불법 유포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사실상 가해자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통제함.
  - 파일의 저장, 복제, 송출이 용이해지면서 불법촬영은 예방이 불가능한 문제가 되고, 유포 가능성이 상존하게 됨. 특히 유포로 인한 연쇄적인 피해 및 기술매개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연계되어 발생함.
  - 불법 유포시 불법촬영물에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되기도 함. 유포 협박 역시 여성의 이미지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나타남.
  - 기술매개 성폭력에서 아동·청소년과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과 대응 능력, 사회적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취약성을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의 심화, 장기화와 예측, 착취적 성격이 더 많이 드러나는 반면 주체적인 대응력은 낮고 피해 인정은 선별적인 모습이 나타났음.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됨. 피해자를 성적 목적의 방송에 동원하는 사례들로서, 채증이 어렵고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방송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조차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증거물의 문제로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편집되어 가해를 은폐하는 증거로 활용됨.
  - 폐쇄적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의 발생 현황 및 규모 파악이 어려워짐.
  -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방송, 모객을 위한 유인 영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같은 유형의 성착취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적 특성과 함께 더 짙은 성폭력적 성격을 보임.
- ▶ 매체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평판 구조를 포함한 기존의 젠더 문화와 만나 기술매개 성폭력의 가해 유형을 변화시켜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들은 법과 제도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이 불법행위이자 범죄로 담론화되고 법제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보완이 필요함.

## ②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법의 한계

### 기술매개 성폭력 특성 반영의 한계

- ▶ 범죄의 구성요건, 성폭력 피해의 의미, 수사 방법과 증거물의 관리, 재판 절차와 물수품의 처리, 법정형 및 양형 기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이 모두 물질성에 기반한 전통적 성폭력 개념을 모델로 하여 구축됨으로써, 기술매개 성폭력의 피해는 사소화되고, 법정형은 낮고, 선고형은 더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새롭게 등장한 행위 유형이 채 반영되지 못한 법은 처벌과 피해자 지원 모두에서 공백을 야기하고 있음.

## 성적 수치심의 요구와 음란성의 처벌

- ▶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정보 유통 관련 조항의 일반법인 「형법」의 음화 제조 및 반포 등의 죄는 ‘음란성’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들 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통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할 것을 요구함.
- ▶ “성적 수치심” 개념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 중에서 수치심이라는 특정 유형만을 합리적인 피해자의 감정으로 인정하고 정상화하며,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섹슈얼리티 규범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과 주요 개념인 “성적 수치심”의 해석에서 법원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념을 그대로 둔 채 전적으로 해석에 맡기게 되면 안정적 법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성적 수치심”과 관련한 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를 입법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음란성”을 이유로 한 처벌 조항은 성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금지함. 이는 여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성적 순결 규범과 결합하여, ‘도덕 규범의 위반자’로서의 여성을 보호에서 배제하게 됨.

##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의 법적 한계

- ▶ 열거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누락과 불균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각각 불법촬영물, 합성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범죄 행위태양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
- ▶ “의사에 반하여” 요건의 한계
  - 기술매개 성폭력에서 ‘반의사’ 요건은 동의의 범위와 동의의 진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함. 촬영, 편집, 유포가 ‘의사에 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목적, 방법, 범위 등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거쳤는지를 질문하지는 않음. 촬영, 편집, 유포 등의 행위 자체에 동의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법은 처벌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
  - 촬영 대상자의 표면상의 의사에 의존하는 법은 발달장애인의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를 판별하는 데 벽에 부딪힘. 위력이나 위계로써 동의를 이끌어낸 경우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히 위계를 이용한 때에는 사례에 따라 법 적용 가능성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나타남.
- ▶ 범죄와 형벌의 불균형
  -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불법촬영물 등이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무한대로 복제, 확산이 가능하고 다른 형태로 변형, 가공되어 2차 콘텐츠로 생산, 재차 유포되어 다수에게 성적으로 소비될 수 있으며, 삭제 지원을 하더라도 온라인에서의 완전한 삭제 또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동의 촬영보다 비동의 유포의 불법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촬영죄와 유포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두어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음.
- ▶ 불안피해 대응의 한계
  - 디지털 이미지의 유포와 관련된 불안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일단 상대방이 반의사 촬영물이 아닌 촬영물을 소지하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촬영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지를 중단시킬 수 없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불안피해도 지속됨.
-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의 한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경우에 협박·강요죄(제14조의3)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적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겠다고거나 허위영상물 등을 아직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제작하여 유포하겠다는 협박 및 강요 등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매우 유사한 행위들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성폭력으로서의 속성 비가시화

- 문자, 부호, 소리, 그림, 사진, 영상 혹은 여러 유형이 결합된 콘텐츠로 구성되는 성적 괴롭힘은, 불법촬영물, 편집물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죄, 모욕죄, 음란물유포죄 등 성폭력범죄 외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젠더폭력으로서 성적 괴롭힘의 해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개인정보 악용의 규제 부족

- 불법촬영물 유포 중 개인정보 유출이 수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개인 식별 정보의 보호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사람이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문제를 다루지 못함. 따라서 온라인에서 취득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술매개 성폭력에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성매매 상황의 불법촬영 등 범죄 처벌의 불가능성

- 여성의 성적 행동과 성매매 등 성적 거래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성적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성매매 이력 공개 모두 여성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성매매 상황에서 촬영 대상이 된 여성은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과 촬영물 유포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위협을 떠안게 됨. 성매매수자는 성매매와 동시에 불법촬영을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대방을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며 촬영물 유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됨.

▶ 온라인 스토킹의 협소한 정의와 대응의 한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온라인 스토킹은 모두 “상대방에게 정보를 도달”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제한되어 있고, 가해자 제재 조치 또한 상대방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구성됨.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스토킹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기술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접근 외의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은 그 내용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행위로 분절되어 처벌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며, 스토킹의 지속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게 됨.

▶ 소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한계

- 그루밍은 간음, 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등 주로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아동 성착취의 준비 단계로서, 아동에게 신뢰를 형성하여 성착취를 성착취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거나 감내하도록 하는 등 적어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해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에 ‘온라인 그루밍’ 입법으로 도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는 그루밍보다 성착취 그 자체에 더 가까운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전반적인 과정으로서의 그루밍이라는 맥락을 드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온라인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여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거나 온라인에서 시작하였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성적 목적의 그루밍에 취약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루밍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술매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한계

▶ 불법촬영물 등 수사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반영 미흡

- 디지털 콘텐츠는 한 번 생성되면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며 삭제하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고, 복제하더라도 품질의 변화가 없고 다양한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할 수 있음. 불법촬영물 등의 수사 과정, 판결, 판결 이후의 폐기에서 파일 복구 가능성, 다양한 보관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담 사례에서 영장 발부의 어려움, 업무 담당자의 지식 부족, 불법촬영물 처리 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압수, 수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전 폐기를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피해자 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의 공개 위험

- 기술매개 성폭력의 사건 처리 및 피해 배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가해자에게 제공될 가능성, 재판 과정 및 판결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촬영물 등이 노출되는 문제 등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문제되고 있음.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법적 한계

-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통합적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을 국가가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분리된 형태로 마련됨.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분절되고,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또한 약화되었음. 삭제 지원은 기술매개 성폭력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지원과 종합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워졌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이나 상담원 양성과정 등에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8년부터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업무 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음.
- ▶ 삭제 지원 대상이 불법촬영물 및 편집물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를 사칭한 온라인 활동,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변인의 사칭 계정 운영,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성적 의미를 결합한 형태의 정보 유포, 촬영물 이외의 성적 콘텐츠 유포 등 다양한 온라인상의 디지털 정보의 삭제, 차단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해야 하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삭제, 차단의 법적 근거나 입증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으로서의 피해자의 대응이 어려우며, 정보 삭제를 위하여 민간 기업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국가의 삭제 지원 기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 증명을 하도록 하는 조항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 기술매개 성폭력은 피해자의 나이, 촬영물에서 피해자 특정 가능성, 피해자의 진술 의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법 해석, 심지어는 수사 방법에 따라라도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그로 인하여 어느 법률이 적용되었는지, ‘성폭력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 지원 가능성이 좌우되고 있음. 이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성폭력으로서 개념화되지 않고 “음란물” 또는 명예의 일반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 처벌 조항의 선별을 통해 성적 폭력으로서의 의미가 소실될 때, 젠더폭력 피해자로서의 보호·지원 필요성 또한 함께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

## 3. 외국 사례와 시사점

- ▶ 비동의 유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의 상시 연결에 따른 실시간성과 확산성에 따라 무한정 재유포되는 피해의 심각성과 영구 삭제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구성요건요소 및 공소시효의 확대가 모색, 도입되고 있음. 온라인 그루밍에서도 아동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성적 대화 등의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아동과의 성적 의사소통 자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각국에서는 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캐나다에서 형사 사건 처리와 구별되는 평화준수서약이나 호주에서의 민사제재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되, 비동의의 유포죄 같은 기술매개 성폭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되고 있음.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담 처리기구에 신원정보 등 강력한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 역시 눈여겨볼 만함.
- ▶ 캐나다나 영국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매개 성폭력의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유형의 행위 제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즉 사후적인 처벌과 불처벌 사이에 조건부 또는 전적인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 사용 제한 명령과 같은 새로운 내용의 보호 장치가 도입되어 있음. 반면 한국의 보호관찰제도와 그 준수사항, 응급조치 등은 기술매개 폭력의 특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접근금지 등 물리적 접촉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네트워크 및 그 장치의 사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위 제한 제도를 우리 보호관찰제도 및 응급조치 구성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수사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보존을 위한 제도나 신분위장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비동의의 유포 등 일정한 경우 이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이에 대응함. 특히 캐나다의 경우 전자증거의 보존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만이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수사가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 기술매개 성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법 제도의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특히 비동의의 유포에 관하여 캐나다에서는 평화준수서약이나 전자증거의 보존 등에 관한 특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위 발생 이전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하고 있음.

## 4. 정책제언

### ●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성 및 유포죄 정비

-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의 죄에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음을 주된 구성요건으로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성적인”과 같이 중립적으로 개정하며, 촬영과 복제,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생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촬영 및 편집등의 죄를 포괄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성할 수 있음.
- ▶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유포 및 소비 행위를, 성적 이미지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산을 촉진하는 행위’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하여 입법적 공백으로 인한 처벌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 반의사 촬영은 “추행”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을 강제추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고 유포죄는 촬영죄보다 높은 형으로 개정하도록 함.



##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 조항 정비 검토

- ▶ 위계에 의한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포섭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향후 분석이 필요할 것임. 「성매매처벌법」의 위계·위력음란영상물등촬영죄(제18조 제1항 4호)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옮기고 촬영 대상의 범위를 넓혀 위계를 이용한 촬영에 적용함으로써 유효한 동의의 부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정비

- ▶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에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성적 이미지의 의사에 반한 소지죄 신설

- ▶ 성적 촬영물 등 성적 이미지를 ‘대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는 ‘대상자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의 지속이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을 때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정상 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성폭력으로서의 속성 가시화

-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통신매체 이용 성적 괴롭힘’의 죄로 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여 괴롭히는 표현’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개인정보 악용 기술매개 성폭력범죄 가중 처벌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성적 이미지에 개인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포하는 경우, 이상을 직접 생성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적 촬영물 등 성적 이미지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성적 괴롭힘’의 내용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함.

## 성매매 상황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대상자를 성매매피해자로 규정

- ▶ 성매매가 성착취로 개념화되지 않은 법현실의 한계 위에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불법촬영 등을 목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 성매매 상황을 이용하여 범한 불법촬영 등의 촬영대상자 또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의 영상물등의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기술매개 성폭력 신고에 있어 피해자가 성매매로 처벌받을 위험을 줄이도록 함.

## 온라인 스토킹의 정의 및 가해자 조치 확대

- ▶ 다양한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여 스토킹으로 개념화하고 법에 열거된 행위유형 외의 스토킹 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보충적 구성요건을 두며, 그에 부합하는 가해자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소위 ‘그루밍’ 범죄의 범위 확대

- ▶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범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접근하는 행위, 성착취의 대상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의 책임과 배상명령의 확대

- ▶ 유포와 관련된 범죄에서는 적어도 일정 기간의 삭제 비용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의 종류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

## 공소시효 적용 완화

- ▶ 최소한 영리 목적 유포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피해자가 유포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반복, 지속되는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개선과 피해촬영물 등 확산 차단 조치 강화

## 수사 과정에서 유포 여부 확인 및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의무화

- ▶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 DNA DB에 기록하고 추가 삭제 및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업무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유포 여부 확인 및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범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하도록 함.

## 온라인 저장소 등 촬영기기 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 촬영기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이에 클라우드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입법 대안이 요청됨.

##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 ▶ 불법촬영물, 편집물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저장한 적이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명령

- ▶ 법원이 선고유예를 포함한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와 더불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소유 또는 관리 가능한 계정에 저장·게시된 촬영물 등 일체의 삭제를 명령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향상

-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삭제 지원 신청을 위해 피해자의 신분 증명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함.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지속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수사 및 재판 지원,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을 위해서는 상담 기관과의 물리적 거리 또한 중요한바, 전국적으로 지원 기관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정비와 지원자 전문교육 실시

- ▶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업무와 역량을 확대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업무 범위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자의 전문 교육, 전국의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지원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삭제 지원 범위 확대

- ▶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성적 모욕이 조합된 내용, 피해자를 사칭한 성적 게시물 등 촬영물, 편집물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 등 온라인에서의 성적 괴롭힘 정보의 삭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의 범위를 개정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좌우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삭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로 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 개념에 이를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일원화하도록 함.

## 참고자료

Dunn, S.(2020),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An Overview,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주관부처: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